社 說

학교측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

장백기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 철회돼야

장백기 본교 전노동조합위원장 복직을위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 대학노조 위원장들도 이에 동조, 본관 대회의실에서 철야농성 8일째를 맞고 있다.

장씨는 89년 노조가 파업했을때 학생신상 명세서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안기부의 학원탄압의 일환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를 불태운 이유로 연행되었다가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구소됐다. 그후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이라는 형을 받아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22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이 기각, 형이 확정됨에 따라 해고되었다.

그러나 이 해고조치는 사립학교법 이후 대학사무직 노동자로서는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라는데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사립학교법이 직접적으로 장씨 해고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를 해고시킬 수 있는 본교의 정관이 사립학교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는데서 현정권의 기만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양상을 '자율'이라는 허상으로 학기초마다 학생운동을 등록금투쟁에로 전환시켰던 작태에서도 흔히 보아온 바이기도 하다.

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육체노동자가 주축이던 노동조합 운동이 사무노동자에게까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 선두주자로 대학노동조합을 지목하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하겠다.

이에 현정권은 대학노동조합의 탄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었고 '사립학교법'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대학노조의 탄압을 가시화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은 법이라는 미명하에 자주적인 노조의 활동영역을 한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악법으로 당연히 철폐되어 마땅하다는 것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다.

다음으로 장씨 해고에 대한 학교당국의 유연성 결여라는 측면에서 많은 아쉬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교 정관에 의거 1심에서 형이 내려지자 장씨를 직위해제 하지않고 봉급의 80%까지를 수령케 한 것이 학교당국으로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한 듯한 감을 준다. 그리고 사회 여건상, 행정상, 형 확정과 더불어 '해고'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장백기 전 노조위원장의 복직이라는 현안은 현정권의 시국사범에 대한 신경질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하더라도 경희가족의 한사람을 다시 우리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학교당국의 재고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는 대립과 대결을 벗어난 경희가족운동에서 나타난 사랑, 용서 그리고 화해라는 취지에 맞는 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대학구성원의 의견수렴없이 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장씨문제에 대한 학교당국의 유연성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

"민초는 밥이 아니다"

추곡가 차액지급 논의에 부쳐

우리는 지난주 농업정책에 관한 당정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했다. 주요한 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가 벼의 수매량을 줄이는 대신 산지 쌀값과 수매가격의 차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이른바 '차액지급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것과 둘째, 부족한 공장부지 해결을 위해 절대농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11월에서 1월까지 실시하는 수매시기를 분산해 농가의 사정에 따라 보관비등을 지급하며 미질에 따라 포장되지 않은 벼의 형태로 차등가격 수매를 검토중이라는 발표이다.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면 이중곡가제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여 농어촌 구조조정부분의 투자를 늘리기위해 전반적인 개편작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뒷받침하여 절대농지제를 없애는 대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진농업을 만들려는 당국의 많은 고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농정에서 피해만 본측은 농민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자 한다. 이땅에 사는 사람들의 '밥'을 생산해내는 농민은 결코 쌀기계는 아니지 않는가. 더욱 우려할 만한 사항은 양곡 관리법을 정부 독단으로 뜯어고쳐 국회의 심의및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곡수매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산적한 난제앞에서 재정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이번 회의를 농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23일 전국농민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상태를 우리는 주목한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정책추진에서 보듯이 민초들의 시선을 딴곳에 집중시켜 놓고서 은근슬쩍 내보이고 잊혀질만하면 '국민합의'라는 미명하에 졸속적으로 집행하는 치졸한 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매스컴에 애드발룬을 띄워보는 식의 정책진행과정은 구태의연한 당국의 단골 메뉴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 정책의 추진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온 민초들의 의견과 다양한 모색을 통해 개방화된 상태에서 합일점을 도출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마주앉아 한목소리를 만들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하는 곳이 당정회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들은 단행되는 것으로 보아 여타 정책과 현안을 결정하는 각기관보다도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수차례 확인하여 왔다. 힘있는 수뇌들의 모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굳이 최근의 'Water West'사건을 말하지 않더라도 한국사회에 던져진 엄청난 충격들과 파급의 시발점이라는 민초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로 국가의 안위와 민초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고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소산인 회의가 되기를 민초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부패한 독재정권의 유지와 폭압적 통치의 강화에 몰두하며 기득권을 계속 잡으려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의 온상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분명 통일선진사회를 이룩해내야만한다. 그런데 정치핵심세력들은 지금껏 민초를 '밥'으로만 여기지는 않았는지, 수서의 돌파구를 지자제로 호도하고 3차국토개발계획을 발표해 선심쓰듯하는 기만성을 민초들은 잘 알고 있음을 위정자들은 명심했으면 한다. 께끗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멋진 정부를 민초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우리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여신규제 완화 방침■

'성장' 구실로 노동탄압강화

사론

"벌어와야 나눠먹을 게 있지 않으냐"라는 재무부 한 관리의 입장 표명에서 우선 분배는 차치하고 나눠먹을 '파이'부터 키워놓고 보자는데서 현 정부의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87년 이후 민중의 요구에 의해 현정부는 경제정책이 기본 방향을 정부규제완화, 분배개선, 균형발전으로 전환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기업에 대한 출자규제, 여신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개혁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제스처는 89년 경기침체를 경제위기론과 노동자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거짓말 처럼 사라져버렸다.

음행적으로 성장해온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 지하금융을 건전한 투자로의 전환을 꾀하고자 했던 '금융실명제'와 임금과 물가상승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투기적 토지 소유를 근절할 의도의 '토지공개념'의 추진은 5공출범이후 가장 혁신적인 경제개혁 정책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을 입안, 강력히 추진해 오던 조순 경제팀을 성장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이승윤 경제팀으로 개각함으로 5공정부의 일말의 경제개혁 의지가 허구임을 드러냈다.

이러한 개각은 현정부가 물가폭등과 대외 경쟁력 약화등 경제침체의 주원인이 노동 임금상승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발표이후 나타난 지가안정과 주가상승등의 현상이 지표화 됨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시각의 문제점을 증명하고 있다.

파행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강화, 소비성 대출 특검착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지난 11월 대기업 비업무용 토지 2백30만평을 업무용으로 구제하고 여신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는등 대기업이 자산증식적 토지소유와 특혜금융을 합법화하여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 의지를 명백히 하였다.

특히 민자당 창당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급선회하여 금융실명제가 실종되는 등 여러가지 개혁입법이 철폐되고 재벌들에 대한 금융, 세제, 재정상의 지원인 강화되는 등 분이구조의 개선과 안정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성장일변도 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난 2월초 임시국회에서 정영의 재무장관이 여론을 떠보기 위해 슬쩍 흘렸다가 지난 6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를 통해 여신규제완화조처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번 방침이 시행 될 경우 여신한도 관리를 받아오던 재벌의 수가 30개에서 10개로 줄어들고, 10대 그룹에 소속된 기업일지라도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2개기업 정도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라고 지금까지 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해 은행이 보증을 서줌으로써 은행여신관리를 통해 대기업의 제2금융권 대출 독과점을 간접적으로 나마 규제했던 지급보증이 한도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2금융권의 돈을 아무 제한없이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

은행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30대 재벌의 은행여신 총액은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포함할 경우, 지난해 말 현재 1년 전보다 23.9% 늘어난 48조2천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민이 채워 넣은 은행금고는 대기업 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게되는 격이다. 89년말 증권시장을 부양시킨다는 명목으로 불과 일주일 사이에 2조8천억원을 지원한 것이나, 90년2월 경기활성화대책으로 재벌에게 설비자금 2조원을 보태준 것 등이 얼마나 높은 물가상승을 유발시켰던가는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이렇게 물가인상의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통화량 증발이라고 볼 때 재벌들에게 여신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나올지는 아무도 상한선을 그을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3저호황시기에 단기적인 이익챙기기에 급급해 재투자보다는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열을 올려왔던 재벌들의 형태를 봤을 때 향후 자금의 흐름이 현재보다 더 왜곡될 것이며 그에 따른 엄청난 물가상승 유발요인으로 인해 민중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 질 것이라는 전망은 더이상 부인을 할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현 정부로서는 이러한 자본의 왜곡된 흐름을 막을 길은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가 사라진 이상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가 이번 방침이 명분으로 내세운 '건전한 경제구조 확립, 제조업 강화'등은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특별외화대출 등을 포함시키고, 비주력업종에 대해 여신규제를 강화했다는 근거로 "여신규제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점을 감안, 이에 상응한 보완책을 세웠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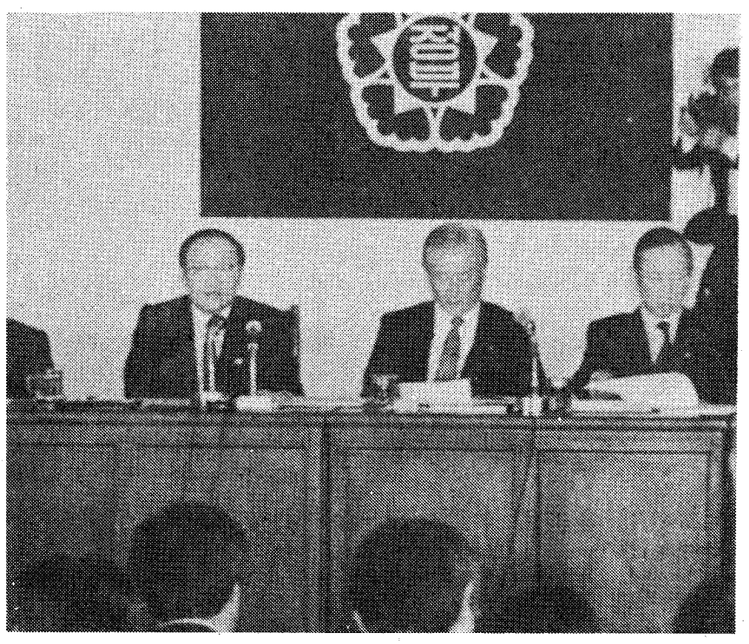
금융실명제가 실종된 지금의 상황에서 돈에 꼬리표를 달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러한 보완책이 실효성을 거두리라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몇가지 전망들을 접할 때 이번 방침 또한 재벌들을 살찌우는 도구로써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 방침이 잠시 언론에 선보였던 때와 거의 동시기에 발표된 정부측의 임금억제정책을 보면 현 정부의 성장정책과 이번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재벌에게 엄청난 지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이번 방침과는 달리 임금인상한자리수 자제와 노사분규 예방을 목표로 세운 정부가 노동자와 관련해 정부측의 임금억제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30대 그룹에 공업발전기금 등의 정책자금지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정부측의 노동자를 무시한 '선 성장 후 분배'의 논리에서 분배라는 측면은 민중들이 키워놓은 '파이'를 평등하게 배분하기 보다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통째로 꿀꺽 삼키겠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 말할 때 이의 평가기준은 1인당 GNP 등의 통계 숫자만으로는 이루어지 수 없다.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복지수준이나 분배의 평등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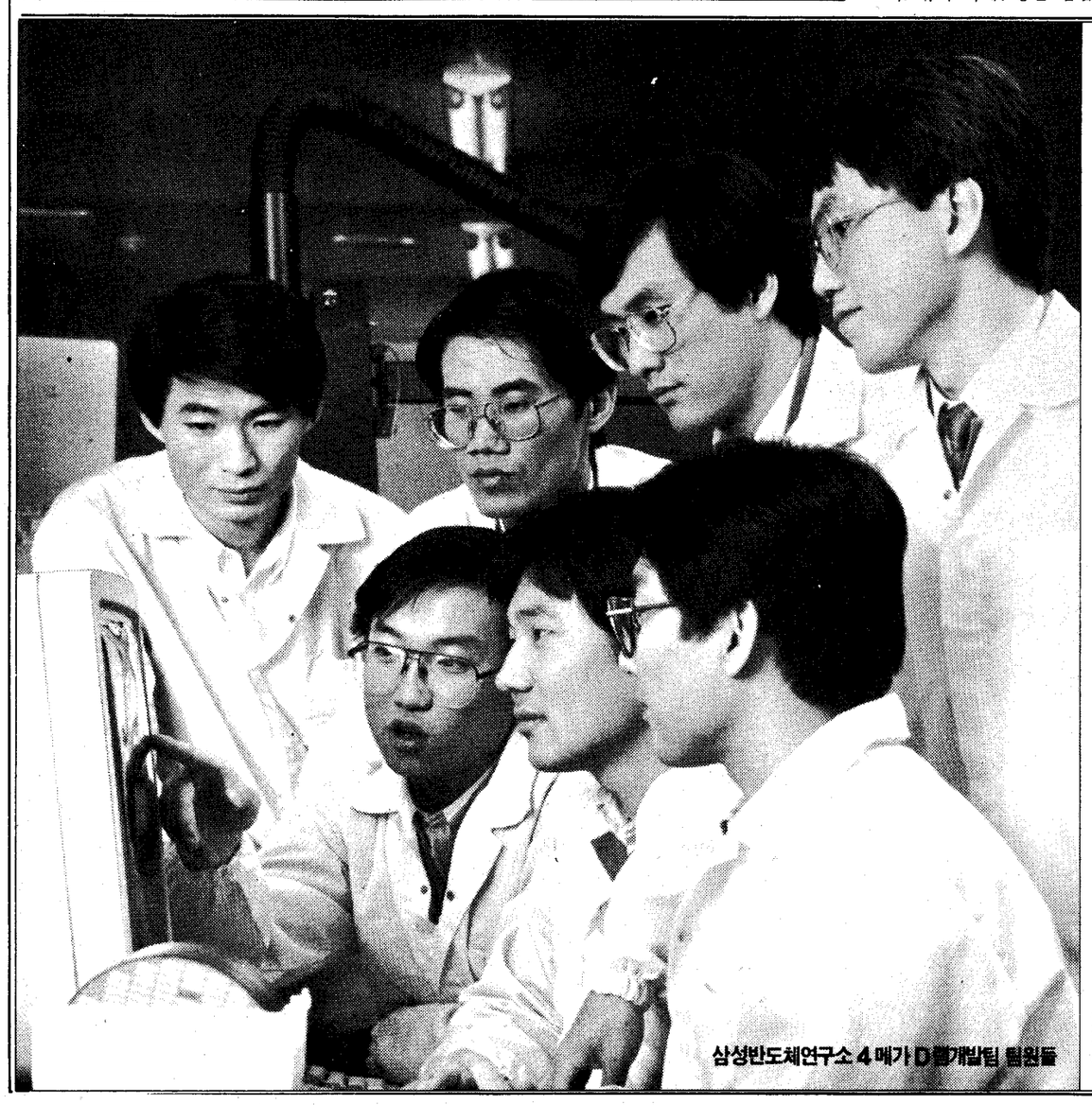
현재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번 여신규제 완화 방침은 국내독점재벌과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설혹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낀다해도 이는 진정한 선진국을 뜻하지는 못할 것이다. 재벌에 대한 지원으로 물가는 치솟고, 고용불안과 저임금구도속에서 민중과 지배권력과의 대립은 격화될 수밖에 없다. 〈조인성記者〉



◇민자당 창당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조는 급선회하였다

재벌 비생산부문 투자증대로 물가폭등 예상돼

금융실명제 없는 상태서 '정부보완책' 실효의문


삼성반도체연구소 4메가 D램개발팀 팀원들

꿈을 펴는 젊음, 미래를 경영하는 三星

'그날의 토요일'이 또 한번 오길 우리는 기대한다.
이제는 추적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해—

또 토요일 오후다.
처음 '7명분의 토요일'을 우연찮게
반납하던 그날의 기대치 이상의 개가에
만족해 해서일까.
한 주일의 땀을 씻으려 총총히 주말의 연구소를
빠져나가는 사우들의 뒷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별 아쉬움을 못느끼고 있었다.
그렇게도 막히고 막히던 4메가 D램의 숙제가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풀려가던 그 토요일 오후의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
친구나 가족, 연인, 자연과의 만남들이
묵계처럼 미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개발할 수 있다는 신념이 정작 우리보다 강한
회사의 지원과 분위기는 몇 억불씩 하는 연구장비를
선뜻 선뜻 준비해 주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4메가 D램의 개발을 위해 뛰어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운 사실이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기술을 주거나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된 것이다.
스스로 알아서 연구해야 할 처지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회사의 지원은 우리에게 아낌없다시피 하였다.
64K, 256K D램 개발의 샴페인 단내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은
4메가 D램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고,
곧 64K, 256K는 시장성을 잃기 시작했다.
4메가 개발에 뛰어든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도
시간은 자비를 베풀줄 몰랐다.
초조함과 미안함은 회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곧 손을 놓게될지도 모를 제조현장 사우들부터
국가에 대한 송구스러움까지 이어지는데는
굳이 그렇게 큰 애국심을 필요로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다시 한 주일의 허망함과 적막함이
연구실에 가득차기 시작했다.
그때 누군가 외쳤다.
"이것봐, 근사치야!"
우리는 누구랄거 없이 무슨 힘인가에 끌리듯
워크스테이션 앞으로 몰려갔다.
그렇게 고대하던 수치가 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신명이 솟는것 같기도 하고,
등골이 오싹한 것 같은 느낌은
나뿐만이 아니었으리라.
그날 7명 어치의 주말 스케쥴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니, 4메가 D램에 집적되버렸다고 할까.
그날 이후 우리 7명의 개발팀은 토요일 오후에
스페셜타임을 갖기 시작했다.
복잡한 일상연구와 업무, 부산하게 움직이는
연구소의 분위기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토요일 오후를 최대한 활용했다.
4메가 D램은 곧 '메이드인 코리아'와
'메이드인 삼성'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
일본이 경악하고 세계가 감탄했던 첫 반응은
곧 세계 2위의
4메가 D램의 수출국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팀 7명의 승리이자,
한국의 승리이기도 했다.
또한 스스로를 믿는 신념과 도전정신을 현상화시키는
분위기와 투자의 승리이다.
또 토요일 오후이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정시에 퇴근하지만,
'그날의 토요일'이 또 한번 오길 우리는 더 기대한다.
이제는 추적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기 위해—

주임연구원 김 명 호

스스로 도전하는 창의정신과 개성을 존중하며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로
2세대 4메가 D램개발의 위업을 달성한 주역들.
위, 좌로부터 김규홍 연구원, 장현순 주임연구원, 배형호 주임연구원, 최윤호 선임연구원,
아래, 좌로부터 김태진 연구원, 석용식 주임연구원, 김명호 주임연구원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